

안보관련법안 채택강행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한일시민공동성명
~일본의 입헌주의 위기는 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한다~

안보관련법안이 이번주 중이라도 중의원 평화안전법제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채택 강행될 예정이라는 보도에 대해 한일의 NGO, 환경재단과 피스보트는 깊은 우려를 표명합니다.

6월 하순에 아사히신문사가 국내 헌법학자 209명에게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답변한 122명 중 119명이 헌법위반 또는 헌법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 합헌이라고 답한 사람은 겨우 2명이었습니다. 이러한 헌법을 위반한 법안을 채택 강행하려는 사태는 일본 입헌주의의 심각한 위기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본 입헌주의의 위기는 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합니다. 왜냐하면 입헌주의의 위기는 “정부의 행위로 인해 다시는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강조한 일본국헌법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평화헌법의 근간을 이루는 9 조는 일본 스스로가 시작한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깊은 반성에서 아시아 근린제국에 대해 “부전(不戰)”을 맹세한 국제공약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일본정부가 독단으로 해석을 바꿔 9 조를 위반한 집단적자위권을 용인하고 이에 근거해 다시 해외에서의 군사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을 성립시키려는 것은 아시아에 사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이전의 일본의 침략공포를 불러일으킵니다.

일본정부가 진정으로 동아시아지역의 안전보장을 생각한다면 근린제국에 사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평화헌법을 준수함과 동시에 엄격한 입헌주의에 입각한 정책으로 군비확산경쟁을 방지하고 대화와 신뢰양성을 뼈대로 하는 지역안전보장틀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피스보트와 환경재단은 한일 시민이 손에 손을 잡고 법에 근거한 평화로 귀중한 생명을 지키고 키우는 동아시아 세계를 실현하도록 더욱 더 한일 교류를 추진해 가겠습니다.

우리는 일본정부와 국회에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1. 국회는 헌법위반인 안보관련법안을 채택강행 해서는 안된다.
2. 일본정부는 헌법 9 조의 해석을 독단으로 변경해 해외에서의 군사행동을 길을 열어서는 안된다.
3. 한국과 일본 NGO는 일본정부가 입헌주의를 존중하고 법에 근거한 평화로운 동아시아를 실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5년 7월 14일

한국·환경재단 대표 최열
피스보트 공동대표 요시오카 다츠야